

삼전·하이닉스 ‘호황의 역설’… 고객사 이탈에 노사 갈등까지

엔비디아 HBM 사양 하향 검토
애플 등 중국산 메모리 적용 확대
공급난에도 가격 주도권 유지 전망

양사 노조 공동 대응 가능성 부상
삼성전자, 노조 자사주 보상 요구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확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인파으로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고객사는 사양을 낮추거나 중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양사 노조가 손을 잡으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업계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루빈 울트라’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최고 사양인 HBM4E 12단을 쓸 계획이었으나 올 3분기 들어 HBM4E 8단과 이전 세대인 HBM4까지 후보에 올랐다. 8단을 적용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한 개당 메모리 용량이 줄어 국내 업체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체 공급처 찾는 글로벌 고객사



생성형 AI가 형성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 고객사 공급망 다변화와 노사 갈등 이미지.

배경에는 공급 부족이 있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까지 D램 공급이 빠듯한 데다 HBM4E 검증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AI 칩 업체들이 사양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업체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HBM4E 12단은 검증이 까다롭고 수율(정상품 비율) 확보도 쉽지 않아 양산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최신 제품이 밀리는 만큼 기존 HBM4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3분기 HBM4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사들은 아예 공급처를 바꾸는 방안까지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등에 중국 CXMT 메모리를 시험 적용하고 있다. HP와 에이서는 이미 미국 외 지역 판매 제품에 CXMT 메모리를 탑재했다.

다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CXMT는 올해 생산분을 대부분 소진해 신규 해외 고객을 받을 여력이 크지 않다. 제시 가격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출

하량이 50~60% 늘어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공급사가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성과급 갈등에 양사 노조 연대까지

호황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6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쟁점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사측은 자사주 60~70% 지급과 2~4년 매도 제한, 적자 시 임금 조정을 제시했다. 첨단 공장 건설에 수습조원이 드는 만큼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발은 새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이날 정식 출범한다. 조합원은 1250명을 넘어섰고 전체 구성원 3만5000명의 절반인 1만8000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낸 DX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요구하며 오는 21일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

문제는 양사 노조가 공동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회사별로 진행

되던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사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 통합노조는 지난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에 자문을 요청했다. 사측이 자사주 지급과 적자 시 임금 조정을 제시하자 앞서 입단협을 마무리한 삼성전자 노조에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조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특히 두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통합노조는 초기업노조의 행보와 비슷하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 노조에서도 초기업노조가 도움을 받은 바 있어 현재 큰 이슈들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11차 본교섭 끝에 9월 5일에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올해는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임금 조정까지 쟁점이 늘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금융공기업 ‘고용 양극화’… 정규직 1명 늘 때 비정규직 2명 늘려

7곳 상반기 전체 인원 314명 확대
기업은행 기간제·하도급 132명 순증
최근 5년 일반직 전환 실적 ‘0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올해 ‘정규직’ 직원을 1명 늘릴 때 ‘비정규직’(계약직 및 하도급 직원)을 2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비정규직 위주로 직원을 늘렸다. 특히 일부 기관은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12개월 미만’ 계약도 운영하면서, ‘고용 안정’을 선도해야 할 금융공기업이 고용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 늘어나는 비정규직 고용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7개 금융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캠코·주택금융공사)은 올해 초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총 314명의 직원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임원·정직원·무기계약직)이 106명 늘었고,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하도급)은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

행·캠코·주택금융공사)은 올해 초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총 314명의 직원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임원·정직원·무기계약직)이 106명 늘었고,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하도급)은

208명 늘었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이 정규직 직원을 62명 줄이는 동안 비정규직 직원을 132명 늘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같은 기간 신보가 41명, 캄코가 3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늘려 뒤를 이었다. 고용기간별로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1년 이상’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5년 내에 7개 금융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수는 ‘0건’이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에는 연구 용역이나 법률 자문, IT 등 비금융적 업무나 전문성 높은 업무도 포함된다”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반드시 처우가 나쁜 것은 아니고, 각 공공기관마다 고용 가능한 직원 수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정규직 직원을 쉽게 늘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퇴직금’ 못받는 비정규직도

각 금융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계약직 및 하도급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관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1년 미만’의 계약직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이 ‘고용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알리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분기 말 기준 전체 계약직 가운데 19.1%를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고용했고,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체 계약직의 15.2%를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육아휴직 대체 고용을 제외하고도 고용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 일 자리를 일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고용 비중이 큰 주금공과 서금원의 공고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 직원들은 대부분 고객 상담·상품 안내 등 창구 업무에 투입됐다.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인데도, 전문성이 높은 정규직 직원 대신 고용비용이 저렴한 계약직 직원을 투입한 셈이다. 특히 서금원은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운영하면서도 재계약 불가를 고용 조건에 명시했다.

서금원은 최근 채용한 단기 계약직 직원들은 수요가 많은 상품의 취급을 위해 한 시적으로 고용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는 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단기 계약직 대부분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취급 및 상담에만 투입된다. 수요가 특히 많은 상품이라 해당 상품의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상품의 취급을 포함한 일반적인 창구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직원들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반도체 산단 전력망 속도… 호남·용인에 20GW 이상 공급

호남권 2029년부터 6GW 이상 공급
용인산단 2041년까지 14GW 이상 확충
전력망 비용분담·인허가 지원 구체화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전력 수요기업이 손을 맞잡고 적기 전력공급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2040년대까지 총 2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인허가와 비용 부담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식’을 열고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 호남권 산단에 6GW+ 공급… 민간 부담 일부 국가재정 지원

우선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총 6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반도체 산단 가동 시점에 맞춰 2단계로 나누어 전력을 공급한다. 오는 2029년부터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전력망과 산단 내 변전소 1곳을 신설해 약 3GW의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세부 기술 검토를 거쳐 2단계로 누적 6GW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1단계 전력공급설비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되,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도 전력망 구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 용인 산단 14GW+ 확충… 노후 석탄 대체 LNG 발전·동해안 선로 조기 구축
2041년까지 14GW 이상의 대규모 전력

이 필요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전력공급 협약을 개정하고 2단계 공급 협약을 신규 체결했다.

올해 7월부터 초기 전력 공급이 시작된 용인 일반산단은 신안성·동용인 변전소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2031~2032년까지 산단 인근 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조기 구축해 전력망을 완성한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관계 기관장들은 신속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 공급”이라며 “정부·기업·지역이 한 팀이 돼

행정절차를 과격적으로 단축하고, 신규 산단 건설에 맞춰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 역시 “특별시는 전력망 구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기반시설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한 팀이 돼 전남광주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국가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